

일본군 '위안부'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

의안 번호	제 55 호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1. 5. 13.

발 의 자 : 김길자 의원

1. 주 문

영등포구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, 특히 일본군 '위안부'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, 일본정부의 공식사과, 법적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 등을 이행토록 우리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토록 결의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임과 동시에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100여년이 되는 해이며, 일본군 '위안부'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지 21년이 됨.
- 그동안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들은 50여년의 긴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, 일본군 '위안부'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유엔과 미주, 유럽,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했으며, 1992년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 '위안부'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도 참석하고 있음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를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 역사를 교육하고 있음.
- 이에 미국, 네덜란드와 유럽연합, 캐나다 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,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으며,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음.
- 이에 영등포구의회는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,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문제해결을 요구하고자 함.

붙 임 : 결의문 1부